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5. 2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모순에 빠진 정부 전기차 정책(15. 2. 4, 전자신문)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와 환경부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음
 - 환경부가 2009년부터 단계적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부가 최근 유사 정책을 내놓아서 부처간 정책 조율 필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산업부는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작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“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”을 마련하고,
 - 이를 환경부와 공동으로 발표한바 있어,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정책이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 - *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전기차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제주도 지역에 택시·버스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스 및 민간 유료 충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발표(’14.12.19, 녹색위)
 - 민간 주도의 제주도 전기차 보급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
- ※ 관련문의 : 에너지신산업과 이귀현 과장(044-203-5390)
에너지신산업과 오재철 서기관(044-203-5391)